

다자간 협력은 물론이고 쌍무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

현재 정보통신시장개방 압력을 가해오는 일부 선진국과의 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익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우리 정보통신사업의 해외진출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새해에는 통신공사가 민영화 됨으로써 기본통신분야에 민간요소가 주입되어 한층 활력이 더해지며, 그동안 회선 사용제도 완화조치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정보통신분야에도 실질적인 민간VAN사업자들이 등장하는 등 민간의 창의력이 도입되어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89년은 통신사업의 민간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첫해로서 기록될 것이며 이러한 체제변화에 따르는 이익분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



사회과학적 중장기 연구과제 개발

金世源
(통신개발연구원 원장)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가 단순히 산업사회를 잇는 하나의 발전된 형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질적,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띠는지에 관한 개념상의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현 여건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우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통신의 혁명은 민주화의 촉진, 계층간 격차의 해소 및 다원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소득분배의 형평, 복지증대, 자원절약 등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갖는 한계와 제약을 극복케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하루가 멀다고 출간되고 있는 서적들을 들추다 보면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 모든 부문에 걸쳐 구석 구석 질적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낙관적인 견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정보화 사회의 밝은 측면만을 가정했을 때의 「바람」에 불과하며, 반대로 현재의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

하여 문제는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보화 사회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함께 이상적인 발전 방향에 맞추어 정보·통신산업을 적절하게 육성해 나가는 일이다. 한국의 경우 더구나 「정보사회」의 개념 자체부터 서구로부터 수입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통신개발연구원(KISDI)의 설립취지 역시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접근과 연구, 그리고 보다 좁게는 이를 위한 정보·통신정책의 대안·개발에 있다. 1985년 설립된 통신정책연구소(ICR)가 국회에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88년 2월부터 통신개발연구원으로 확대·재편됨으로써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형평과 효율간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정보사회의 연구를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국민복지의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정책 대안의 수립 및 수행에는 한국적 여건과 또 사회적 수요가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동태적으로 그 방향의 설정 또한 근본

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88년은 거의 1년간 설립 초기 KISDI가 한 일은 주로 기구의 정비, 연구분위기의 쇄신, 연구방향의 확정, 그리고 연구활동의 지속으로 종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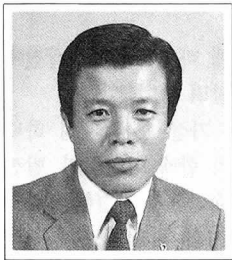
2년째를 맞는 새해 치증하려는 사업은 무엇보다도 5개의 실에 따르는 기능, 분야별 연구활동과 연구과제의 수행이라는 二元体制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연구조정실, 정책연구실, 정보문화실, 동향분석실 및 국제협력실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정책연구실에 소속된 과제별 연구팀을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 운영하고자 한다.

다음, 국가적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하여는 근본적으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팀별로 전공과 관련하여 이론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요금정책, 공공기업의 민

營化 경쟁정책, 시장개방 그리고 법령제정 및 정비 이외에도 경제, 경영, 사회, 정치, 법 등 제사회과학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중장기 연구과제를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밖에도 새해 중요사업의 하나로서 KISDI가 명실공히 국가적 데이터뱅크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동향분석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나 이에 추가하여 정보·통신 관련분야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자료실의 보강 등이 뒤따라야 한다.

끝으로 한국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1989년은 교육적 차원에서 정보사회가 가져오는 사회과학적 창의를 폭넓게 인식되고 또 국민 모두에게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보통신분야의 위상정립 필요성

金 永 泰

(에스·티·엠 사장)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분야가 어떤 수준이어야 할까. 누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에 부닥친다. 공적인 학술회나 좌담회에서도 이런 의제를 중심으로 갑론을박하고 사적인 술 자리에서도 이런 화제로 안주를 삼는다.

우리 한국이 IMF 8조국이 된 이 시점에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또는 영국의 수준을 하루라도 빨리 쫓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EC제국중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독일의 현재 체도를 따라야 할지, 대만이나 남미의 어느 나라들을 택하여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입에 거품을 물며 논쟁을 한다. 신중론을 펴는 사람이나 적극론을 펴는 사람이나 이런 논의는 활발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도 그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의견이라면 결코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나설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는 각자의 논지와 근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속단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든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 92년도에 예상되는 통합된 EC 제국내에서의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하여 커다란 변혁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89년의 한국은 세계경제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고,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짧은 기간동안에 점증하게